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1931~1937*

안 종 철**

- | | |
|-----------------------------------|----------------------------------|
| I. 머리말 | III. 1930년대 중반 신사참배 강요와
미 국무부 |
| II. ‘만주사변’ 이후 신사참배 문제
의 대두와 타협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이 시작되자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권역(bloc)내의 무역에만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가고자 했다. 일본은 메이지정부 발족(1868)부터 시작된 영미와의 ‘국제협조주의’를 이 시기까지도 계속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일본 군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특히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도 경제적 곤궁이 밀어닥치며 사회가 불안해지자 군부 측은 조선과 만주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도모했다. 당시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만주의 철과 석탄 등의 자원획득을 위해 중국에 대해 강압

* 이 논문은 제268차 한국사연구회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는데(2009.3.21) 연세대 서정민, 중앙대 장규식 두 선생님의 비평은 논문 수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관동군은 중국군이 먼저 평토편[奉天] 북부 외곽의 류타오후[柳條湖] 근방에서 만주철도선을 폭파했다는 구실을 붙여 1931년 9월 만주전역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했다.¹⁾ 일본 정부도 군부 측의 도발을 사후에 승인했다.

군사행동이 확대되면서 만주에서는 일본군 사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일본 군부의 주도로 일본 정부는 군인들의 영혼을 위해 이듬해 1932년부터 서북지역의 평양일대에서 각급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²⁾ 이 지역은 경의선을 통해 만주로 바로 연결되는 일본의 주요 정치·경제적 배후지로 치안이 중요했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전부터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당국으로서는 이 시기에 각급 사립학교에도 참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³⁾ 이에 새로이 주목된 것이 개신교계 학교들이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전통의식으로 종교적 의례를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개신교계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 몇몇 학교들이 폐교되었고 상당수 개신교인들이 일제의 정책에 저항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⁴⁾ 그렇지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대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조선 총독부의 기독교 정책, 그에 대한 내한선교사, 한국 개신교계 등의 대응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미션스쿨을 경영한 개신교 선교사들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호주

- 1) '만주사변'의 배경은 鳥海 靖·松尾正人·小風秀雅 編, 1999 《日本近現代史研究事典》(東京堂出版, 東京) 262~264의 <滿洲事變と滿洲國> 항목; 유신순, 1994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고려원,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총서 15) 1~2장 참조.
- 2) 전남 광주에서도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1932년 1월에 '만주사변 기원제(祈願祭)'에 광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측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전남 도당국이 학교 측에 엄중히 경고한 수준에 그쳤다. 김승태, 2006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 문제와 선교부의 대응> 《한말·일제 강점기 선교사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169
- 3)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김승태 編, 1991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45~55; <일본 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 《같은 책》 221~244
- 4) 김승태 編, 1991 《위 책》에 실린 여러 논문들 참조.

출신이었고 그 중 미국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동경과 서울의 미국 외교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⁵⁾ 만약 미션스쿨을 운영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면 미일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므로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한 입장 조정이 불가피했다. 그것은 일본 측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미 국무부의 입장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선교사들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다.⁶⁾

미 국무부는 자국 외교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정치적·종교적 사안에 대해 ‘엄정중립’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므로⁷⁾ 이는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전

5) 1884~1910년 사이 내한한 선교사의 총수는 대략 499명 정도인데 이 중 미국의 4대 교파(북 장로교, 남 장로교, 북 감리교, 남 감리교) 출신이 387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류대영, 2001 《초기 미국선교사연구, 1884~1910-선교사들의 증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27.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식민지시기에 더 늘어났지만 전체 선교사들 중 차지한 비중은 바뀌지 않았다.

6) 도널드 클라크의 연구는 서울 총영사관측과 선교사들 간의 대립을 암시한다. Donald N. Clark, 2003,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T: EastBridge) 219~221. 한편 신사참배 논란의 주역 조지 맥쿤(George S. McCune)과 외교관들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시론적 검토는 안종철, 2005 <운산온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2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89-90; 駒込 武, 2006 <朝鮮における神社參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倉澤愛子 外編 《帝國の戰爭經驗》 (岩波書店: 東京) 75~78

7)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의 정치개입을 우려해서 미 국무부는 서울의 존 실(John M. B. Sill) 공사에게 현지 미국인들의 정치 불개입을 강조하는 ‘회람’을 돌릴 것을 명령했다. 1897년 5월 11일 자 회람공문(enclosed in Sill to John Serman, May 15, 1897), Di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 to Korea, 1883-1905. File Microcopies of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 C.(No. 134, rolls 1-22); 이에 대해서는 류대영, 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112~114

과 달리 미국이 영국과 함께 일본의 만주침략을 소극적이거나 비난하고 있었고 미션스쿨 운영으로부터 선교사들의 철수를 둘러싸고 자국민이 깊게 개입되었다. 그러므로 이전에 현지에서 발생한 분규, 예를 들면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미국인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 경우에 미 국무부가 자국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미일관계의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인가가 초점이 되었다. 미국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철수한다면 미일관계가 악화될 것이었기에 이는 일제 측에도 새로운 시험거리였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직전까지는 가능한 한 ‘민간관료’들을 중심으로 미일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 논문에서 중일전쟁 직전까지 신사참배논란에서 미일간의 협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것이 해방 후 갖는 의미를 추측해보고자 한다.

II. ‘만주사변’ 직후 신사참배 문제의 대두와 타협

‘만주사변’ 발발직후 일제의 평양지역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미션스쿨인 숭실학교와 숭실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조지 맥쿤(George S. McCune)은 신사참배가 종교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당국의 입장을 비판했다. 당시 일본 재향군인회 평양지부 회원들은 선교사들을 비난했고 일본신문들도 이에 동참했다.⁸⁾ 이것은 식민통치에 있어서 군부 측의 압박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일본 정부는 영미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했으므로 군부의 영향력

8)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Failure of Certain Mission Schools in Korea to Participate in Memorial Celebrations on September 18, 1932," 1932년 12월 1일 (395.1163/8);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gitation Over Failure of Mission Schools to Participate in September 18th Celebrations," 1932년 11월 25일(395.1163/9), 이만열 編, 2003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 -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자료총서 제 35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 23~34

은 차단되었다. 즉 일본의 ‘민간’정부가 군부에 대해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이 시기 총독부와 미 국무부의 교섭과정은 중일전쟁(1937) 전후로 본격화된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미 당국이 취했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주침략 이듬해인 1932년 5월 15일 일단의 하급 장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5·15사태).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문민’내각이 군부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일본 정계 수뇌부의 일부인 조선총독부로서는 구미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었던 선교사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만주국 설립 1주일 후인 1932년 3월 9일, 총독부는 미국과 영국 선교사 각 12명을 은행협회(Banker's Club)에 초청해서 회담을 가졌다. 일본 측 참가자는 총독 직속(官房)의 외사과(外事課) 과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와 통역관 오다 야스나(小田安名)였다.⁹⁾ 서울의 미 총영사는 총독부가 선교사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선교사들이 일본의 관점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이 회합의 목적이라고 파악했다. 이 회담 직전에 일본군은 군사작전을 확대해서 상하이로 침공했으므로 총독부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에서 일본에 불리한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다.¹⁰⁾ 외사과 통역관이 선교사들에게 영미의 친구들에게 일본 통치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영미 여론에 민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교사들 중에서 일본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총독부 측과의 모임을 준

9) 외사과는 1939년 8월까지 총독직속(官房)으로 있다가 총독부의 외사부로 독립했다. 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朝鮮總督府, 京城) 413; 宮田節子 監修, 2000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 (1) 十五年戰爭下の朝鮮統治> 《東洋文化研究》 2(정재정 譯, 2002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해안: 서울) 53의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가 조사한 표 참고).

10) John K. Davi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3월 14일, No. 73. (395.1163/6), 《신사참배자료 I》 16~19

비하면서 이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시국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받은 선교사들은, “면 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자신들이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관용과 법과 질서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¹¹⁾

회담 직후인 같은 해 3~4월에 외사과의 오다는 남부지방의 선교지부들(mission stations)을 방문해서 현지의 영미 선교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 대해 선교사들이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¹²⁾ 여기서도 선교사들은 일본의 만주침략행위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선교사들의 ‘협조’에 답하기라도 하듯 당국은 같은 해 평양에서 발생한 신사참배 소동에서 암묵적으로 선교사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1932년 9월 17일에 평양지역에서는 신사에 안치된 일본 군인들의 영령에 참배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미션 스쿨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배예식이 거의 두 달 가량이 지난 11월에서야 일본계 언론이 이 문제를 갑자기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 재향군인회의 활동 때문이었는데 이회는 만주의 관동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¹³⁾ 서울에서 발행된 일본계 신문인 『朝鮮日日新聞』은 11월 17일부터 평양지역의 선교사들, 특히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 교장인 맥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신문은 신사참배강요에 유화

11) Ibid., 《신사참배자료 I》 18~19

12) John K. Davi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4월 1일, 395.1163/5, 《신사참배자료 I》 15

13) 재향군인회는 규정 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만주침략 이후 明倫會·皇道會 등 전위조직을 내세워 군비확장, 국제명징운동 등을 선동했다. 須崎愼一, 1977 <日本型ファシズムへの道をめぐって-在郷軍人政治組織=明倫會・皇道會の検討>, 藤原 彰・野澤 豊 編, 《日本ファシズムと東アジア》(青木書店: 東京) 29-33. 재향군인회 일본, 조선, 대만 지부 회원 수천 명은 만주침략 이듬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鈴木大將入京-日本在郷軍人會議 長春서 開催> 《동아일보》 1932년 6월 3일자.

적인 자세를 취했던 평안남도 당국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¹⁴⁾

재향군인회의 선동과 일본신문들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자 평안남도 당국과 서울의 총독부도 일정한 대응을 했다. 특히 1932년 11월 19일에 평안남도 도지사 후지와라 키조(藤原鬼城)와 미국 선교사들 간에 이루어진 모종의 합의가 주목된다. 그 내용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의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평양의 신문들은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불교적 의식이 생략된다는 조건으로 향후 의식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하면서도 평남 당국과 선교사들의 ‘애매한’ 태도를 비난했다. 특히 서울과 평양의 재향군인회 지부는 선교사들과 총독부간의 “해결(settlement)”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경의 재향군인회 본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¹⁵⁾ 총독부 의견을 대변하는 서울의 『京城日報』는 선교사들과의 11월 19일 자 ‘합의’를 해명하면서도 선교사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총독부 측이 재향군인회의 선동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남 도지사도, 신사참배는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종교가 아닌, “애국심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므로 신사의식에 불참하는 것은 조선교육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⁶⁾

선교사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제 측은 선교사들과의 타협을 존중하고 그 이면합의를 공표하지 않았다. 평양의 원로 선교사 사무엘 모펫(Samuel A. Moffett)은 후지와라 도지사가 향후 미션 스쿨이 참여할 신사의식에서 모든 “종교적 요소를 없앨 것을 약속”해주

14)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gitation Over Failure of Mission Schools to Participate in September 18th Celebrations,” 1932년 11월 25일 (395.1163/9), 《신사참배자료 I》 29~34. 이 문서에 《朝鮮日日新聞》 1932년 11월 17, 18, 20, 21, 22, 23, 24일 자, 그리고 《京城日報》 1932년 11월 22일 자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15) Ibid., 《신사참배자료 I》 30~31

16) 《京城日報》 1932년 11월 22일; 《신사참배자료 I》 50~52

었다고 서울의 미 총영사 존 데이비스(John K. Davis)에게 털어놓았다. 모팻은 도지사가 외부의 압력에 휩쓸려서 약속을 바꾸지 않을까 우려했다.¹⁷⁾ 총영사 데이비스에게 이 사건은 겉보기보다 더 중요했다. 평양이 기독교 중심지로서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있음을 조선총독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본 군부가 민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양을 “시범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¹⁸⁾

서울의 미 총영사는 일본 현지의 “불안정한 상황”과 “전쟁을 부추기는 심리적 상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 등은 이후 문제가 될 것이므로 상부의 “보다 현명한 인사들(wiser heads)”이 신사참배 논쟁을 종식시켜 줄 것을 주일 미 대사관에 요청했다.¹⁹⁾ 주일 미 대사인 조셉 그루(Joseph C. Grew, 1880-1965)²⁰⁾는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무부 극동국에 조선 내 신사문제를 보고하면서 나름대로 예비적 조치를 취했다. 그는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로마 교황 사절에

17)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ttendance of Mission Schools at National Shrines,” 1932년 12월 9일(395.1163/10), 《신사참배자료 I》 55~56

18) Ibid., 『신사참배자료 I』 57~58

19) 앞의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1932년 11월 25일(395.1163/9) 문서

20) 그루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보스턴(Boston) 출신으로 미국 동부의 엘리트 학교들인 그로톤(Groton) 고등학교와 하버드(Harvard)대학을 졸업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 등이 동문이자 지인들이었다. 1904년부터 미국 외교단에 뛰어들어 1945년 2차 대전 종전까지 외교 관료로 활동했다. 1932년부터 1942년까지 주일 미 대사로 근무했고 42년 미국 귀환 후 국무부 극동국 국장, 부장관, 장관 대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 천황과 반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Joseph C. Grew, 1944 *Ten Years in Japan: A Contemporary Record Drawn from the Diaries and Private and Official Papers of Joseph C. Grew* (Simon and Schuster: New York)의 출간목적 중 하나는 일본 내 ‘운건파’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이다. 서문 참고. 그루는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 중, 천황제 유지와 상징천황제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中村政則, 1989 《象徴天皇制への道-米國大使ぐる-とその周辺》(岩波書店: 東京) 110~125

드워드 무니(Monseigneur Edward Mooney)와 미 감리교 감독 찰스 레이프스나이더(Charles S. Reifsnider)와의 대화를 통해 일본주재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려 했다. 이에 교황 사절은, 1932년 9월 30일자로 문부성이 자신에게 보내온 문서에서 신사참배 의무는 “교육적 이유, 즉 충성과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은 종교의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²¹⁾ 그루는 문부성이 신사참배가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고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의 총영사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 언론과 재향군인회의 선동이 그들의 “과도한 애국적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²²⁾

그루의 의견을 접수한 국무부 극동국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울과 동경 외교관들의 판단, 즉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했다.²³⁾ 이는 ‘만주사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무부도 일본군부가 민간 관료에게 압력을 강하게 가함으로써 미션스쿨에 대한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했다는 서울과 동경의 해석에 동조했다.²⁴⁾ 사실 군부는 만주침략을 위한 동원에, 전몰장병들에 대한 추도를 겸한 신사참배가 핵심기제라고 보고 있었다. 만주에서 일본의 이해를 확보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수단에서 영미협조주의를 표방한 일본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입장일 수 없었다.²⁵⁾

21)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12월 1일(395.1163/8) 문서.

22) Ibid.

23) 극동국 메모, 1932년 12월 22일, 《신사참배 I》 26~28

24) 극동국 메모, 1933년 1월 17일, 《신사참배 I》 53

25) 이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전후 일본 수상을 역임한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이다. 그는 ‘만주사변’ 당시 이태리 대사로 있으면서 일본 군부의 입장을 비판했지만 만주침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John W. Dower, 1979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99-104 ; 入江 昭, 1966 & 1991 《日本の外交》 & 《新日本の外交》(中央公論社: 東京)(이성환譯, 1993 《일본의 외교》(푸른산, 서울) 107~119)

평양지역 최대교파인 미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일본 군부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만주사변’ 당시 서북지역 조선인들의 반중국인 정서로 평양의 중국인 거리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지켜본 그들은 군부가 조선에서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 이는 맥쿤이 1933년 여름, 워싱턴의 미 국무부를 방문해서 조선의 상황과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직원들과 나눈 의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²⁶⁾ 맥쿤은 지난 6개월간 일본의 조선인들에 대한 태도는 이전 보다 더 부드러워졌지만 이는 일본이 만주에 “조선인들을 대량으로 이주시키려는” 속셈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쿤은 앞으로 만주국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1931년에 새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즉 동경의 미 대사관이 일본의 고위 관료와 협의해서 1920년대 조선에서 활동한 서양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사이트 마고토(齋藤實) 전 총독과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전 정무총감 등에게 압력을 가해 신사참배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²⁷⁾

극동국은 맥쿤이 언급한 조선과 만주의 문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당국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과 동경의 공관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서울 총영사관은, 대사관이 “우연히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어서 “논란이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²⁸⁾ 동경대사관도 이에 동조했는데 그루는 “신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애국심과 충성심의 표현이다”는 요지의 일본 문부성 차관의 글과 1899년 8월 3일의 문부성 명령 12호를 첨부해서 극동국으로 보

26) 회답에 극동국 국장 혼백(Hornbeck)과 직원 솔리스베리(Salisbery)가 참석했다. 극동국 메모, “Conditions in the Far East,” 1933년 8월 9일 (395.1163/13), 《신사참배자료 I》 66-68

27) “Conditions in the Far East,” 1933년 8월 9일 (395.1163/13).

28)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1933년 10월 3일(395.1163/15), 《신사참배자료 I》 80

냈다.²⁹⁾ 그리고 그루대사는 맥쿤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다룰 것을 주장했다.

문제는 주로 다음의 사실로부터 생깁니다. 기독교 국가와 달리 일본 인들은 종교와 애국심 사이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학교와 관계 당국이 조정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대사관이 이 문제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쪽에서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³⁰⁾

이는 미국인들에게 신사참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책을 바꿀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문제를 제기해 보았자 아무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루가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미국 동부의 명문가 출신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일본에서 천황가의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³¹⁾ 그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억류되어 있다가 1942년에 미국에 돌아가서 국무부 극동국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신도가 “일본인들 내에 깊게 자리 잡은 전통”으로서, 군국주의가 신도를 이용한 면이 있지만 “군국주의가 제거된다면 신도는 전후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는 천황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신도 부활은

29)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Question of Attendance by School Children at Certain Ceremonies Held at Shinto Shrines,” 1933년 10월 4일, No. 545(395.163/14), 《신사참배자료 I》 75~79

30) Ibid.

31) 中村政則, 1989 《앞의 책》 76~92. 그는 주로 궁정그룹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특히 전후 일본의 수상이 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천황제의 존속과 직결된다. 그는 천황이 신이라는 해석에 반대했지만 군국주의자들이 제거된 후 천황제와 신도는 전후 일본 통치에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³²⁾

국무부 극동국은 동경 미 대사의 입장에 동조했다. 극동국도 일본인들이 신사에 봉안된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취하는 “존경의 형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³³⁾ 그렇지만 신도가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그 근거로 일본 문부성과 내무성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극동국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사의 종교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우려했다.³⁴⁾ 그러나 국무부 극동국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일본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동경과 서울의 미 외교관들 중 상당수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국무부 극동국에서 대일 전후계획, 특히 천황제 존속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³⁵⁾

결국 1932년 평양지역 북장로교 계열의 학교들에 대해 신사참배는

32) 中村政則, 1989 《위의 책》 41~42, 52~54. 천황과 신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당시 주 동경 영국대사관의 샌섬(George B. Sanso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샌섬은 1904년부터 1940년까지 동경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미영 전시 협조외교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1940년부터 가르치면서 동 대학의 초대 일본학연구소장(1948~1952)을 역임했다. 샌섬에 대해서는 細谷千博, 1975 <ジョージ・サンソムと敗戦日本: — 《知日家》 外交官の軌跡 > 《中央公論》 9 (中央公論社, 東京) 참조. 샌섬은 국무부의 일본과장이었던 휴 보튼(Hugh Borton)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천황제 유지를 주장했다. 휴 보튼에 대해서는 안종철, 2006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보》 189 (역사학회) 참조.

33) 극동국 메모, 1933년 10월 23일, 《신사참배자료 I》 72~73

34) 극동국 메모, 1933년 10월 24일, 《신사참배자료 I》 74

35)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조셉 그루(Joseph C. Grew), 유진 두우만(Eugene H. Dooman) 등인데 이들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전후에 천황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中村政則, 1989 《위의 책》 127~160

강요되지 않았지만 이 파동을 둘러싸고 표명된 미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이후 본격화되는 신사참배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Ⅲ. 1930년대 중반 신사참배 강요와 국무부

일제는 1930년대 중반 만주에서 확대되는 전황을 수습하기 어려워 지자 후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 사상 통제의 일환으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이는 1935~36년에 일본 내에서 발생한 ‘천황기관제설’ 논쟁, 2·26쿠데타 등 군부주도의 정국 확립과 연동되었다. 조선에서 신사참배는 전설상의 천황의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明治; 재위 1868~1912)천황을 기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천황숭배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천황 쇼와(昭和; 재위 1926~1989)를 정점에 두고 파시즘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있었다.³⁶⁾

미 국무부의 대응은 1935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신사참배 파동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주지하듯이 1935년 11월 14일, 평안남도 도지사가 관내 사립학교장들의 신사참배 요구에 맥쿤이 불응하자 문제가 확산되었다. 서울의 총영사관도 이 사건을 즉시 확인, 동경을 통해 극동국에 보고했다. 윌리엄 랭던(William R. Landon) 총영사³⁷⁾는 앞으

36) 김승태는 이 시기 신사참배 문제의 본질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문제라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김승태, 2006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문제와 선교부의 대응> 앞의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159~160

37) 랭던은 서울 총영사관(1933~1936), 만주 심양총영사관(1936~1937), 동경대사관(1938~1941)에서 근무하면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였다. 1941년 6월부터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태평양전쟁 기 중국 쿤밍[昆明]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1936년에 외무대신을 역임한 이시이 키쿠지로(石井菊次郎)의 『外交余録』을 편역해서 미국학계에 소개할 만큼 뛰어난 일본어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William R. Landon ed, 1936 *Diplomatic Commentaries by Viscount Kikujiro Ishii* (Johns Hopkins Press : Baltimore). 식민지 시기부터의 한국에서의 활동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해방 이후에도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1945년 10월부

로 국무부가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를 1935년 12월 10일 자료 상부에 보냈다. 그는 평양의 신사참배 문제가 1932년 논란의 재판이지만 이번에는 “심각한 형태(in acute form)”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지사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세 학교 교장의 거부와 한국 장로교 측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³⁸⁾ 조선 기독교인들 중 소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강직”하며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총독부 측과 이들이 충돌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³⁹⁾

랭턴은 신사의 종교성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Chosen Mission)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⁴⁰⁾ 측에 자신의 사건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곧 발표될 로마 카톨릭 측의 공식반응을 기다려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기독교인들과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므로 그 동안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라는 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⁴¹⁾ 실행위원회 측도 총영사관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교육 사업

터 활동했다. 그에 대해서는 김광운·정병준, 1994 <<주한미군 정치고문 문서>> 해제> <<大韓民國史資料集- 駐韓美軍 政治顧問文書>> 18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김지민, 2002 <해방 전후 랭턴의 한국문제인식과 미국의 정부수립정책> <<한국사연구>> 119 (한국사연구회) 참조.

38) Langdon to Edwin L. Neville,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2월 10일, (395.1163/21), 2~5, <<신사참배자료 I>> 102~104. 랭턴도 개인적으로는 신사의식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Donald N. Clark, Op. Cit., 215.

39) 위의 Langdon to Neville, pp.3~7. 랭턴은 일제 당국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동아일보>> 12월 1일; <<조선일보>> 12월 5일, 9일; <<조선중앙일보>> 12월 8일 자에 실린 학무국장의 의견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같은 문서에 첨부된 “Obeisance of School Pupils at Jinja,” Seoul Press, 1935년 11월 29일도 당국의 입장, 즉 ‘신사비종교론’을 잘 보여준다.

40)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선교부 전체의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로 선교부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41)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2월 10일, (395.1163/21), 8.

으로부터 선교부가 철수할 때 발생할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선교사들의 권리에 대해서만 질문했다. 랭던은, 교육철수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며 상부에 조회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권리의 원천”인 1910년 9월과 10월에 미일 정부가 주고받은 “교육과 선교사업의 자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장”을 상부에 상기시켰다.⁴²⁾

그는 1935년 12월 9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사참배 불가입장이 12월 19일에 총독부에 통보되었다는 소식을 상부에 전했다. 일제 당국이 실행위원회 측의 서신을 반송하자⁴³⁾ 랭던은 이를 총독부의 “유화적인” 태도로 해석하면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도 했다.⁴⁴⁾ 그러나 총독부는 12월 말에 맥쿤과 선교사들에게 보낸 최후통첩에서 “신사참배는 교육상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선교사회가 마음을 고쳐서 신사참배를 성실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⁴⁵⁾

그러나 총독부는 랭던에게 이듬해인 1936년 가을까지 미선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intimated)”했다. 이는 조선선교부, 조선장로교 총회,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연례회의가 동년 6월, 9월, 9월에 차례로 개최된 후 총독부가 최종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⁶⁾ 랭던의 보고서를 접한 미 국

42) Ibid., 8-9.

43) Langdon to Edwin L. Neville,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2월 14일 (395.1163/22), 《신사참배자료 I》 115~133. 이 보고서 뒤에는 16개 정도의 한국 신문을 번역해서 한국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44) Langdon to Grew, 1935년 12월 20일 (395.1163/23), 《신사참배자료 I》 135~136

45) Langdon to Grew, 1936년 1월 6일 (395.1163/24)에 첨부된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신사참배자료 I》 141~145

46) 위의 Landgdon to Grew, 2~3

무부 극동국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그
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보았다.⁴⁷⁾ 그러나 조선과 미국의 개
신교 단체가 신사참배 불가론을 강경히 주장하는 한, 이듬해로 문제
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었다.

랭던의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맥쿤과 송의여학교 교장 스누
크(Velma L. Snook)는 학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1936년 상반기
조선에서 사실상 추방되었다.⁴⁸⁾ 랭던은 두 사람이 해임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무렵 총독부는 각 학교의
교장과 부교장을 가능한 한 한국인들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
다. 그는 학무국장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의 “학교 이사회
가 후임자를 찾을 수 없다면 당국이 적절한 인물을 (직접) 모색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입장을 국무부에 전했다.⁴⁹⁾ 당시 사립학교법
상 당국은 학교가 추천하는 교직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
접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었다.⁵⁰⁾ 그러므로 이는 위협전술로써 당국

47) 극동국 비망록, 1936년 2월 12일, 《신사참배자료 I》 137. 이 비망록을 작성
할 시점에 맥쿤과 스누크는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외교자료교환은 극소수의 전신을 제외하고 대개 서신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와
문서를 주고받는데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극동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48)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395.1163/25). 맥쿤의 입장은 이 문서의 첨
부물인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신사참배자료 I》 156
~157 참조.

49) 위의 Langdon to Grew, 4-5에 인용된 《경성일보》 1월 23일 ; 《조선일보》
1월 20일 자 기사.

50) 교원임명(면)에 관해서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조항이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제 3조는 “설치인가 사항의 변
경: 사립학교 설치가 인가된 후에 목적·명칭·위치·학칙 또는 설립자를 고
치려고 할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교장이나 교원을 갈려고 할 때에는 도장판에
게 각각 청원을 내어 인가를 받아야 하고, 校地·校舍의 소유자나 유지방법을
고치려고 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다. 손인수, 1971 《한
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12~116. 물론 당국은
1936년 당시 유효한 「사립학교 규칙」 14~16조 상 학교폐쇄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Langdon to Grew, 5.

은 원하는 인물을 은밀히 추천할 수 있었다.

또 학무국장은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 부지는 “학교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교사 대표들은 이에 대해 “학교부지는 학교를 위해 임대된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랭던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총독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일본 본토와는 달리 사실상 “진행될 (operative)수 없기 때문에” 총독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것이라고 보았다.⁵¹⁾ 또한 신사참배 반대를 주장하는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평안도와 전라도(남장로교)에서 경찰들이 이 문제로 선교사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선교사들이 단일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였다. 비록 선교사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당국은 개신교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랭던은 선교부 소속 학교의 운영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았다.⁵²⁾

총독부와 평양의 선교부가 충돌하면서 미션 스쿨들의 폐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독부가 여전히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랭던은 현재의 상황이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총독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든가 “신학적 논쟁에 개입”하는 양자택일만 가능할 뿐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랭던은 1936년 9월로 예정된 미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가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총독부도 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다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⁵³⁾

51) 학무국장의 의견은 《조선일보》 1월 19일 자; 앞의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 6.

52) 위의 Langdon to Grew, 8.

53) Ibid., 9.

랭던의 인식과 달리,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의 운영을 임시로 맡게 된 사무엘 모펏(Samuel A. Moffett)은 당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므로 학내에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과 결국 충돌하게 되었다. 맥쿤이 추방될 즈음,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숭실전문학교의 한국인 교수가 모펏의 입장을 가지고 학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학내로 돌아오지 않는 20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입장에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동의하면서 학내 인사들은 선교부가 조선인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936년 2월 18일 자로 발표했다.⁵⁴⁾ 즉 참배반대파와 찬성과 간의 갈등이 학내분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때 평양 재향군인회지부 회장이 모펏을 방문하려고 하자 그는 맥쿤과 함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의 충고에 따라 2월 18, 19일 각각 서울로 떠났다. 평양의 다른 선교사 일부도 함께 했다.⁵⁵⁾ 랭던은 학교재산과 선교사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총독부 경무국에 신변안전을 부탁할 필요성을 느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1931년 완바오산[萬寶山] 사건으로 야기된 평양의 중국인 학살을 알고 있었다. 랭던은 2월 19일,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총독부를 찾아가서 재향군인회의 “위협적인 활동”과 이전의 중국인 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평양의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 총독부는 이에 따라 선교사들의 보호를 위해 평양 경찰서에 예비적 조치를 취했다.⁵⁶⁾

54)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395.1163/28), 2~4, 《신사참배자료 I》 162~164. 랭던이 언급한 한국교수는 이훈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후일 숭실전문 부교장에 임명되었다. 클라크는 위의 문서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랭던이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인지하고 곤란한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Donald N. Clark, *Op Cit.*, 215. 그러나 랭던은 신사참배를 일본 내 문제로 보면서 정치적 파장에 주로 관심을 쏟았다.

55) 위의 Langdon to Grew, 3. 숭실전문과 학교의 조선인 교수와 학생들의 분위기와 선교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송전, 송중경영을 조선인에게 양도요구> 《기독신보》 1936년 2월 26일자

이와 별도로 1936년 2월 20일, 모팻 등은 총독부 학무국을 방문해서 타협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므로 총독부 측은 랭던에게 선교부와 총독부의 타협안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랭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독부 측은 “좀 더 고분고분한 조선인들”에게 학교를 책임지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을 조선인들에게 인계하라는 압력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에 선교사들은 당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완화된 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허락한다면 한국인을 부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생들 “스스로 신사참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⁵⁷⁾ 그리하여 1936년 3월 말 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독부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져 숭실재단 학교들의 후임 교장 인선이 결정되었다. 랭던은 실행위원회 측의 후임 교장인선 수용에는 총독부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미래에 선교사와 학교가 신사참배를 면제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평양은 다시 차분한 상태가 된 듯했다.⁵⁸⁾

랭던은 선교사들의 재산문제 이외에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장로교 조선선교부가 1936년 3월 말에 임시 선교부회의를 군산에서 개최하려고 했을 때 군산경찰서는 이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토론한 후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우려해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선교부는 모임이 “한 해의 선교사역과 재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총영사관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랭던은 총독부 외사과를 찾아서 이 모임은 선교사들의 선교관련 업무를 다루는 “사적인 집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일본에서 발생한 군부쿠데타(2·26사태)로 총독부의 허가

56) Ibid., 4.

57) Ibid., 5.

58) 전문학교 교장에 엘리 모우리(Eli M. Mowry), 부교장에 이훈구, 숭실학교 교장에 정두현(명예교장 모우리), 숭의학교 임시 교장에 김승섭(교장 O. R. Swallon이 안식년 중)이 임명되었다. Langdon to Grew, 1936년 3월 24일 (395.1163/30), 《신사참배자료 I》 177~178

를 받지 못해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랭던은 총독부 측의 집회불허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신사참배 문제로 총독부가 선교부의 일상적 모임에 “개입할 것”이라는 선교부의 우려는 “정당화하기 어렵다(not justified)”고 남장로교 선교부 측에 설명할 정도로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했다.⁵⁹⁾ 랭던의 입장에 동의한 국무부 극동국은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가 “미일간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면서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⁶⁰⁾

극동국에는 1936년 초에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이 전달되었다. 초교파 국제기독교 단체인 국제선교사 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IMC) 총무는 미 국무부 극동국장 스탠리 혼백(Stanley K. Hornbeck)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선과 만주에서 각기 신사참배와 만주국에 대한 충성 문제로 개신교 목사와 교인들이 일본 당국에 억류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무부의 관심을 촉구했다.⁶¹⁾ 어떤 한 일본인과 하와이 한국 기독교인 연합회 등도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들어 일제의 참배 강요를 비판하는 서신을 국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⁶²⁾ 이에 대해 극동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

59) Langdon to Grew, “Prohibition of Meetings of American Missionaries,” 1936년 2월 26일(395.1163/31), 《신사참배자료 I》 179~181

60) 극동국 비망록, 1936년 2월 28일(395.1163/25), 3월 9일(395.1163/27), 3월 24일(395.1163/30), 《신사참배자료 I》 146, 159~160. 극동국은 1910년 10월 6일에 일본 외무대신이 동경 미 대사에게 확약해준 사항 중 ‘종교자유’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미일 간 조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61) 국무부 극동국 비망록, “Conversation between Warnshuis and Hornbeck,” 1936년 3월 20일(395.1163/29), 《신사참배자료 I》 168~169

62) 일본인의 입장은 Langdon to Grew, 1936년 4월 14일(395.1163/32), 《신사참배자료 I》 183의 첨부물. 이 일본인은 중국에서 통조림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로 서울에 와서 선교부에 자신의 글을 전달했다. 그는 일본의 신도가 다신교 전통에 매여 있는데 이는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The United Korean Christian Society of Hawaii to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 1936년 5월 8일(395.1163/33), 《신사참배자료 I》 168~169, 190~197. 하와이교회의 편지는, 미국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극동에서의 미국인의 위신은 추락하며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

다는 증거는 없다.

랭던에 이어서 신사참배 문제를 다룬 사람은 그의 후임 앤드루 에드슨(Andrew W. Edson)이었다. 1936년 6월 25일부터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에드슨 영사는 총독부와 선교부 사이를 중재하는 일에 관여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인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와 로우즈(Harry A. Rhodes)를 '억류'하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의 전화를 받고 에드슨 영사는 총독부 경무국장 타나카 다케오(田中武雄)를 방문했고 그의 중재로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문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⁶³⁾ 에드슨은 실행위원회 측에 선교사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전했다. 즉 총독부가 “정부와 행정에 해가 되지(prejudicial) 않는” 범위에서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위해’ 여부는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국은 “외국 정부의 종교문제에 대한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국은 “잠정적인 시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에드슨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복잡한 문제를 “매우 유능하게(very capably)” 처리하고 있다고 보았다.⁶⁴⁾ 즉 랭던과 에드슨의 입장은 거의 동일했다.

서울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려고 했다. 에드슨 영사는 1936년도 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일본에 건너가 대표적인 북장로교 선교사인 라이샤워(August K. Reischauer

이라고 했다. 이 글은 맥클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하와이에 4주간 머물면서 한인교회에서 연설한 직후 작성되었다. G. S. Patton to War Department, 1936년 5월 7일(395.1163/37), 《신사참배자료 I》 244~249

63) Edson to Grew,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nd Teachers at Japanese National Shrines,” 1936년 6월 17일(395.1163/36), 4~8, 《신사참배자료 I》 222~226

64) 위의 Edson to Grew, 2~3; 극동국의 에드슨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비망록, 1936년 7월 23일(395.1163/35), 《신사참배자료 I》 218

r)⁶⁵⁾ 등을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 이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해외선교사들 중 “가장 강한 근본주의자들”로 그들의 신학사상은 일본만이 아니라 뉴욕 해외선교부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주재 선교사와 일본 당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어서 일본의 미션스쿨에서는 신사에 “학교 대표만 참배”한다고 했다. 이들의 눈에는 “신사예식에 참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 기독교인들은, 조선의 미 장로교 선교사들을 “박해받는 순교자(persecuted martyrs)”가 아닌 “별나게 까다로운 분파주의자들(ultra-meticulous sectarians)”에 불과한 인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선교부가 일본 기독교계의 “도움”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일본 선동가들의 주장, 즉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조선선교부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있다는 선전에 좋은 재료가 된다고 보았다.⁶⁶⁾

서울로 돌아온 에드슨은 실행위원회의 홀드크로프트에게 일본 선교사들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경찰이 선교부 연례회의 개최 전에 두 위원을 억류해둔 것은 “고압적(highhanded)”인 조치였지만 이는 일본의 “법집행 권한 내 문제”라고 설명했다. 1936년 연례회의 개최 전날인 6월 24일,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교육철수문제를 두고 파견한 현지 조사단인 제임스 로저스(James Rodgers)와 폴 애보트(Paul Abbott)가 서울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에디슨과 의견을 나누었다. 에디슨이 보기에 이들은 “자유주의적 견해”와 “세련된(tactful) 접근방식”을 가진 인사들로서, 조선선교부가 일본의 정책

65) 그의 아들 중 하나가 후일 미 하버대학교의 일본사 주임교수와 주일 미 대사 (1961~1965)를 역임한 에드윈 라이사워(Edwin O. Reischauer)이다.

66) 두 선교사들의 입장은 Edson to Grew (Confidential),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 Policy,” 1936년 7월 6일 (395.1163/38), 1~3, 《신사참배자료 I》 233~235 참조. 극동국의 입장은 극동국 문서, 1936년 8월 3일(395.1163/38), 같은 책, 230~231 ; 일본 개신교계는 “어떤 국가적 요구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정서”가 주류였다. 서정민, 2000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기독교회와 민족국가 관계론 연구》 (한울 아카데미: 서울) 179~194 참조.

에 복종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심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교부가 정부시책에 복종한다면 당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⁶⁷⁾ 조사위원단에 대한 령단의 이러한 인식은 위원단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보낸 공식보고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6월 25일 에드슨은 이들 위원단과 함께 총독 우가키의 사저에서 열린 점심만찬에 참석하면서 이 모임의 비공식적 성격과 환대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에드슨은 6월 25일 저녁부터 열린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했다.⁶⁸⁾ 이 연례회의는 69대 16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수안을 통과시켰고, 각 선교지부의 자율권을 허용하자는 소수안을 68대 19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에드슨은 학교가 폐쇄되기보다는 선교부가 학교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학교운명을 맡게 되어, 두 위원이 언급한 해외선교부의 정책, 즉 교육·의료·전도사역에서 “토착조직으로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⁶⁹⁾

에드슨은 연례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한 “자유주의적 소수파(liberal minority)”의 교육정책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서울의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에드윈 쿤스(Edwin W. Koons), 마르고 루이스(Margo L. Lewis)와 서울의 한국인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입장이었다.⁷⁰⁾ 이 소수파의 안은 학교가 소재한 각 지역의 선교지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교육사업에서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중등교육에만 한정하

67) 위의 Edson to Grew, 3~4, 8. 에드슨은 부영사 랠프 코리(Ralph Cory)와 함께 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경찰들이 상당히 예의바르게 행동하면서 선교사들의 개별적 토론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68) 연례회의에 경찰과 함께 총독부 의사와 두 명의 직원도 참석했다. Ibid., 5~6

69) 에드슨은 당국은 교육인계를 받은 한국인들이 “더 고분고분해질 것”이며 ‘토착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bid., 8

70)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2008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54~59, 115~128 참조.

려고 했다. 에드슨은 두 위원이 소수의견에 동의했다고 보았다.⁷¹⁾ 두 위원은 비록 선교부 전체의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중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전이 철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을 절충하려고 했던 것 같다.⁷²⁾ 뉴욕의 해외선교부는 위원단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선선교부의 철수안을 받아들였다.⁷³⁾

선교사 연례회의를 통과한 교육사업 철수 안에 대해 국무부 극동국은 조선선교부가 신사참배문제에 “부적절한 종교적 중요성 (undue religious significance)”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⁷⁴⁾ 서울 총영사관 측은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평양지역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조선인들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극동국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극동국은 일본거주 미 선교사들의 “상식적인 관점,” 즉 신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⁷⁵⁾ 같은 해 여름에 나온 교황청의 ‘신사비종교론’ 성명은 총영사관의 판단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⁷⁶⁾ 극동국은 랭던, 에드슨 등 현지 인사들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⁷⁷⁾

71)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7일 (395.1163/39), 3~5, 《신사참배자료 I》 256~258

72)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6, 이만열 編, 2004 《신사참배 영문 자료집 II-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자료총서 제 36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I》), 146

73) “Board Action of September 21st, 1936: The Chosen School Situation,” 2, 《신사참배자료 II》 150

74) 국무부 극동국 비망록, 1936년 8월 3일 (395.1163/38), 1, 《신사참배자료 I》 230

75) Ibid., 2, 《신사참배자료 I》 231 ; 극동국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한 비판은 극동국 비망록, 1936년 8월 14일 (395.1163/39), 같은 책, 252~253도 참조.

76) <신사참배하는 카톨릭 교회> 《경성일보》 1936년 8월 2일 자, Edson to Grew,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s at Shrine Ceremonies”, 1936년 8월 13일(395.1163/40)의 첨부물, 《신사참배자료 I》 264

극동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북장로교 다수와 선교사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관리들에게 신사참배 불가론 즉 '신사종교론'을 설득하려 했다. 예를 들면 홀드크로프트는 북경에 가서 북경 주재 미 공사 넬슨 존슨(Nelson T. Johnson)에게 신사종교론을 설명했다. 그는 일제의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교육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공사는 왜 북장로교 측이 카톨릭 측처럼 일본의 '신사비종교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신사에 영령이 깃들어 있다"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극동국은 이러한 대화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다.⁷⁸⁾

미국으로 간 맥쿤은 1937년 초 극동국을 방문, 유진 두우만(Eugene Dooman)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선선교부가 학교를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총독부가 취하고 있다며 국무부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본 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두우만은 "해당국의 종교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무부의 정책이라고 답변했지만 이 문제를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국무부 장관이 서울과 동경 공관의 의견을 물었다.⁷⁹⁾ 동경 미 대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조선총독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936년 조선에 부임해온 총영사 게이로드 마쉬(O. Gaylord Marsh)⁸⁰⁾는 조선선교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특히 남장로교 해외선

77) William Philips to Grew, 1936년 8월 5일 (395.1163/38), 《신사참배자료 I》 250~251

78) 이들은 북경의 연경대학(Yenching University)의 환영만찬에서 만났다. 홀드크로프트가 북경에 간 이유는 확실치 않다. John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Protestant Missions and the Shinto Question in Chosen," 1936년 10월 30일(395.1163/44), 《신사참배자료 I》 285~291

79)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1937년 1월 21일(395.1163/45), 《신사참배자료 I》 292~294 ; 이에 대한 국무부 장관의 조치는 같은 책, 295

80) 마쉬 총영사는 '과테말라 총영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외교가에서 중남미의 정원에 대한 강의로 유명했다. 마쉬는 조선의 지명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식

교부가 1937년 2월 24일에 발표한, 신사참배 반대론을 핵심으로 하는 ‘폴턴성명서’를 극동국으로 보내면서 남장로교 측을 맹비난했다.⁸¹⁾ 아울러 그는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다수파에 속하는 맥쿤이 “언행이 부주의하고, 표현이 불완전하고, 발언이 선동적이며, 몸가짐이 괴이한,” 일본 당국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이라고 혹평했다.⁸²⁾ 마쉬도 선교부의 재산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무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신사참배와 같은 종교문제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신사는 일본 당국의 “편의적인 국가 철학”이므로 만약 “애국적인 행사”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초대된다면 이에 참배하고 싶다고 마쉬는 주장했다.⁸³⁾ 마쉬는 자신이 영사로 있었던 과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선교부나 교회의 활동에 “한계”를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신사참배

이름을 사용했는데 Seoul이라고 이름이 붙은 총영사관의 편지지를 버리고 케이조(Keijo)로 적힌 것으로 대체했다. 또 국무부의 국가색인(Foreign Service List)에 표기된 서울(Seoul)을 일본의 공식지명인 케이조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O. Gaylord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Correct Name of Seoul,” 1937년 4월 20일 (895.014/2),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30-193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Scholarly Sources Inc., 1986, 2 microfilm, Rolls. 그의 부인 루스(Ruth)는 그림을 그려서 미나미 지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미나미는 답으로 자개로 장식한 서예품을 보내왔다. 마쉬는 총영사관 부지 내에서 중국인 요리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일화는 Donald N. Clark, Op. Cit., 206~209; U. Alexis Johnson (With Jef Olivarius McAllister), *1984 The Right Hand of Power: The Memoirs of An American Diplomat* (Prentice-Hall : NJ) 39-40

81)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1937년 2월 25일(395.1163/47), 《신사참배자료 I》 301

82)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1937년 3월 8일(395.1163/48), 2, 《신사참배자료 I》 305

83)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3월 8일(395.1163/48), 2, 《신사참배자료 I》 307. 마쉬도 신사의 종교적 요소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동양인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동양적인 종교적 관념”으로 보았다.

와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에 불과했다.⁸⁴⁾ 그는 실제로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일제의 ‘신사비종교론’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마쉬가 선교부의 재산과 선교사의 안전을 신경쓰지만 대다수 선교사들의 입장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⁸⁵⁾ 마쉬는 내심 평양의 한인보, 이춘섭 등과 광주 지역 유지들이 미션스쿨을 인수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⁸⁶⁾

국무부 극동국은 북장로교만 아니라 남장로교 측의 강경한 성명서 채택에 대해서 미 당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맥쿤 등이 주장하는 신도의 종교성은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수와 선교사들이 근거로 드는 1901년 일본 민사법원의 판단 중 신사의 종교성 관련 부분은, 판결문에 “부수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므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⁸⁷⁾ 극동국은 신사참배를 비판한 선교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 외교관들의 ‘신사비종교론’적 입장은 일본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 일제는 선교사와 한국인 개신교인들 사이를 확실히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개신교 선교사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반대했다. 그러므로

84) Ibid., 2

85) Rhodes to Leber, “The 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7월 27일(RG 140-12-21), 《신사참배자료 II》 269~270

86)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3월 8일 자 문서에 번역·첨부된 《조선일보》 1937년 3월 2일 자 기사 참조.

87) 극동국의 비망록(1937년 5월 3일과 4월 13일), 《신사참배자료 I》 299, 304

학교운영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했다. 한편 수많은 한국인들은 신사참배를 일본인들만의 의식으로 보았으므로 이들의 대응은 ‘민족주의적’인 측면도 존재했다. 그러나 미션스쿨을 폐쇄하는 문제는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신사의식의 종교성을 지적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였다. 당시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민지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학교 소유주체와 관련 없이 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폐쇄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바랐다. 교육에 관련된 선교사들 상당수도 교육기관을 선교부에서 한국인들에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극동국, 동경 주일 미 대사관, 서울의 미 총영사관 측은 주재국의 종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다. 동경의 그루 대사는 일본 주재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거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보수적인’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일본 고유의 습속으로 보면서 천황에 대한 참배는 국가의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불필요하게 일제 당국과 충돌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루의 입장은 서울의 랭던과 에드슨, 마쉬 등 한국 내 미 관리들의 것과 동일했는데 이들은 내심 한국인들의 학교 인수활동을 지원했다. 국무부는 중일전쟁 이후에도 미일 간에 가능한 한 타협을 통해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후 전개된 일본사회의 반서양적 분위기는 그러한 노력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국무부는 1940년 11월의 일단의 미국인들이 철수할 때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글은 선교사 교파 중 미 복장로교만을 주로 다룬 한계가 있는데 다른 교파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중일전쟁 전후로 미 국무부가 취했던 ‘애국행위’로서의 신사참배라는 평가와 ‘중립적’ 조치는 태평양전쟁 중 미국의 대일정책, 특히 천황제의 유지라는 ‘보수적인’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것이 전후 미일, 혹은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요한 과제인데

이는 후일의 연구과제이다.

주제어 : 신사참배, 국무부, 북장로교, 미션 스쿨, 조지 맥쿤, 윌리엄 랭
던, 조셉 그루

투고일 : 2009. 3. 1 / 심사완료일 : 2009. 4. 25

<ABSTRACT>

Japanese Enforcement of Shinto Shrine Worship
in Colonial Korea and the U. S. State
Department Response, 1931~1937

Jong Chol An

Since Japanese encroachment upon Manchuria in 1931, Japan gradually tried to enforce shintoism upon Korea. It is widely known that the Japanese project conflicted with American missionaries and Korean christian's religious conscience, the tension resulting in some human costs in late colonial period. But American diplomats were reluctant in sacrificing the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U. S. and Japa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alogue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s and Japanese ones, the area that has been neglected so far.

In opposition to an assumption that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was a crucial point in the U. S. and Japanese relations, there were many dialogue between two countries about the Shinto enforcement upon mission schools. At this tim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id not enforce Shintoism upon the schools in order to make positive images of Japan in the U. S. Joseph C. Grew, then US Ambassador to Japan, also evaluated Shintoism and concluded that Shinto worship is only patriotic ceremony.

Actually, there came different situation with the coming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Before the war, Japan gradually steeped into militarism so that the government began to enforce the worship

upon mission schools. William R. Langdon, consul in Seoul, wrote an interesting memorandum saying that the U. S. had only two options: whether SD follow Japanese order or involve into other countries' religious affairs. The implication is that U. S. did not have sufficient reason to intervene into Shinto affairs in colonial Korea except mission property rights. Other U. S. officials also agree to Langdon's approach. The U.S. 'neutrality' had a different message to each party, Koreans, American missionaries and Japanese. The post-World War II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U. S. dates back to the antebellum period as this paper shows.

key words : Shinto Shrine Worship, Northern Presbyterian (PCUSA), Mission School, George S. McCune, William R. Langdon, Joseph C. Grew